

다주택 양도소득세 종과 · 주담대 제한

〈주택담보대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투기지역 주담대 세대당 1건

LTV와 DTI 각각 30% 적용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다주택 양도소득세 종과 제도가 부활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건수와 DTI·LTV 등도 규제해 앞으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매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은 투기목

적의 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및 금융제도를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최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매입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거래량 중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한 비중은 지난 2013년 5.1%이었지만 올해는 14.0%로 4년 만에 약 3배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양도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를 고강도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규제책은 크게 양도소득세 종과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지난 2014년 폐지됐던 양도소득세 종과가 부활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3주택자는 주택수와의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의 6~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종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한다.

주택수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되며,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양도할 때부터다.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시와 동탄2도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종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서도 종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의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주담대를 차주당 1건까지 가능하게 해,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추가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담대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담대를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이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와 DTI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를 각각 30%를 적용된다.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다. 이 중 더 강도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다.

국토부는 전 금융업권의 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공정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나 기금 등의 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담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록도 적극 유도하는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北 참석 ARF, 북핵 국면 전환점?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북핵 국면 전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ARF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해 모두 27개국이 참석한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리용호 외무상을 대표로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최희철 외무성 부상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필리핀에 대사관이 없는 북한이 ARF 관련 사전 조율 목적으로 외무성 당국자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 자신들의 핵 무력 고도화가 정당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ARF 주요 참석국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경우 15개 참석국과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미국·중국·일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외교장관 양자회담의 경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나, 예정에 없던 회동이나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회동이 성사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래 첫 남북 당국 간 접촉이 된다.

미국 측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열어 "어느 시점에 북한과 앉아 미래에 대해 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정권교체와 붕괴를 노리지 않는다는 입장도 또다시 확인했다.

북한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함에 따라 이번 ARF에서 북한과 미국 간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가 미중 간 남중국해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 북핵 문제에 관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핵잠수함 개발 관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중지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다시 추진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송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도 핵잠수함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어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인 2004년 해군은 해군본부 내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고 2020년까지 4000톤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축우라늄 등의 문제로 여론이 주목하자 중단됐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물속에서 탐지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기 쉽다. 디젤 잠수함은 속력이 낮기 때문에 속력을 올리고 한 시간만 운용을 해도 잠수함 내 충전지가 방전돼 하루에 두 세번 씩 수면위로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한다. 충전을 하기 위해 엔진을 돌리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쉽게 위치가 노출된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군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접견

여름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진해 해군기지 공관에서 한국 최초 해외수출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리아미잘드 리아푸드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조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20%이상 농축된 우라늄 획득이 문제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핵연료인 우라늄의 농축량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핵무기는 95%이상의 농축이 필요하지

만 핵추진 잠수함은 20% 이상이면 된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배치를 위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은 높다.

하지만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측과

의 협의를 잘 이끌어내겠다고 해도 중국의 강한 반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일본의 핵무장 발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필요하다. /뉴시스

송영무 "검토할 준비 돼"… 북한 건조 이야기 나와 한미원자력협정 · 중국 반발 · 일본 핵무장 등 암초

한국당 혁신선언문 발표 "광장민주주의 위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일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류석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촛불민심'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낙남 혁신위 대변인은 "촛불시위가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위험성이라기보다는 지금 헌법에 나온 대의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보다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뉴시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